

토지·문화재 정보 한곳에

2011년까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오는 2011년 이후에는 개발하려는 땅의 용도지구·지역 등 토지구제 정보뿐만 아니라 농지보전정보, 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문화재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 규제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1일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보전정보를 국민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구제 정보를 제공하는 건교부 토지종합정보망을 기반으로 농지정보(농림부), 환경정보(환경부), 갯벌

정보(해수부), 산림정보(산림청), 문화재정보(문화재청) 등을 추가로 연계해 통합하는 작업을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건교부가 간사기관을 맡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의 국토정보 관련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 일반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여러 부처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1년까지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